"타워크레인노조 때문에 못살겠다" 고질적 웃돈 요구 관행 본격 수사

호남·제주철콘협회, 37명 고소
"3년간 피해 수십억원 "주장도
건설현장 불법 근절과 맞물려
경찰, 조만간 줄소환 계획
노조측 "성과급 등 명목" 반발

경찰이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의 '웃돈 요구' 등 관행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아파트 공사 현장일을 주로 하는 광주·전남 건설 업체의 고소에 따른 수사지만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과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측으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받아 민주노총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과 간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협회 측은 지역 6개 철콘업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 고소장과 함께 확보해둔 녹취록·동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3년간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폈다.

업체 측 고소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타워크레인 기사와 조합 간부는 37명에 이른다. 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150여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4명 중 1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경찰은 이르면 내주부터 줄소환을 계획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와 조합 간부들이 받는 혐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이다.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요구, 급행료 성격의 웃돈 요구 등을 놓고 양측은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지만, 업체 측이 이번에 문제로 삼은 것은 급행료 성격의 돈이다.

구체적으로 광주·전남 건설현장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수년간 뜯겼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노조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요구를 받고 업체 측 의지와 관계없이 현장에 투입된 기사 1명 당 월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인 측 조사를 통해 피해 내역을 구체화한 뒤 조합 간부 등 조종사 6~7명을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또한 업체 측을 상대로 추가 피해 사실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움직임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 관계자는 "(업체 측은 뜯겼다고 주장하나) 공기 단축 등을 위해 기사들이 위험한 일을 하거나 가욋일을 한 데 대해 성과급 내지 월례비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며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을 왜 이제와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법정서 다투겠다"고 했다.

실제 노조 측 주장대로 광주지법은 지난해 6월 철콘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월례비에 대해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철콘업체(원고)가 월례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1심 결과인데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 성격"이라며 "고소인(업체) 추가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노조의 (불법적)금품 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만큼 경찰 수사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노동계 안팎에서 감지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건 인사이드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부부

각자 부모 집에 얹혀살아…양육 다투다 홧김에 아이만 남겨놔

20대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광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달아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나주시 아동보호팀은 A(27)·B(여·23)씨 부부를 영아 유기 혐의로 합동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 30일 비용을 치르지 않고 광주시 서구 모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을 나섰다. 3일 동안이나 신생아를 찾으러 오지 않자 병원 측 신고를 받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과 나주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출산과 양육을 두고 다툼을 벌여오다 홧김에 병원을 박차고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1년 남짓 사귄 사이로, 지난해 8월 갑작스레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급히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한다. 출산이 임박해지자 나주에 살던 부부는 지난달 말 병원을 찾았다.

둘은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각자 부모 집에 얹혀살고 동거는 하지 않았다. 둘 다 대학 졸업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출산과 출산 이후의 양육을 놓고도 입장이 달랐던 것도 줄기찬 다툼의 이유가 됐다.

아빠 A씨는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아이를 키울 의지가 없었으며, B씨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던 것으로 나주시는 파악했다.

말다툼에 지쳤던 아내 B씨가 퇴원일인 지난 30일 화를 참지 못했고, "남편이 아이를 신경 안 쓰겠다고 하니, 나도 그러겠다"며 병원을 뛰쳐나갔다고 한다. 이후 병원비는 남편 A씨 가족이 치렀다.

나주시 관계자는 "B씨는 아이를 꼭 키우고 싶어 하지만, 당장 경제적 능력은 물론 양육 방법조차 서툰 상황"이라며 "아이 엄마와 꾸준히 면담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나주시는 "일시적으로 아이와 엄마는 분리 조치할 계획이다. 당장은 분리돼 있어도 엄마는 언제든 아이를 만나러 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아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부부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 양육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아동 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위험천만 오토바이 충돌 사고 3일 정오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역 부근 도로를 달리던 배달용 오토바이가 2명이 탄 건너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동승자가 목과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서 레저용 경비행기 추락…2명 사상

2명이 탑승했던 레저용 경비행기가 3일 오후 나주 영산강으로 추락, 조종사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

이날 오후 4시께 나주시 다시면 한 캠핑장 인근 영산강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전남소방상황실과 나주경찰서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조종사 A(60)씨와 탑승자 B(56)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조종사는 사망했다. 동승자 B씨 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가 난 레저용 경비행기는 개인 소유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행기 추락 사고 경위는 국토교통부 항공관리국에서 조사할 예정으로 현재 경찰은 사고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알아두면 유익한 개정 법 상식 2제

학대받는 아이 친권박탈 청구 가능…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권한을 확대했다. 그동안 아동학대를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우선돼야 했다.

하지만, 학대를 한 가해자인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과 친척이 나서지 않으면 대리인 선임조차 어려웠다는 점 때문에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던 점을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도 도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성적 수치심'서 '성적 불쾌감' 변경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 느끼는 감정을 고려해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을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6차 회의를 열어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정안은 향후 의견 조회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 인자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하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은 삭제했고 '처벌 불원'만 남겼다.

종전에는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삭제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고 형량 범위를 조정해 양형기준 상한선 대부분이 종전보다 무거워 진 점도 변화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은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상향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이 발생했을 때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최대 징역 8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종전 징역 4~7년에서 징역 6~9년으로 늘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9577	1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99번길20, 101동 2층202호[화정동,화정동고운하이플러스아파트] 84.2401㎡	아파트	424,000,000 424,000,000	
2021타경 78245	1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7길31, 7층708호 [주월동,한양아파트] 84.84㎡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 76492	1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577 453㎡[토지일부도로]	대	59,135,160 59,135,160	일괄매각.매각대상토지위에식재된수목은매각포함
		영광군 백수읍 성지로6길 173 96.26㎡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1타경 8451	1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70번안길9, 가동 2층202호 84.2932㎡	다세대	221,000,000 221,000,000	2021타경77853 [중복]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8338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148-1 1175㎡	답	305,500,000 305,5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148-2 1135㎡	답	278,075,000 278,075,000	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148-3 615㎡	답	150,675,000 150,675,000	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143-2 387㎡[공부상지목'답'이나현황'전'.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94,815,000 94,815,000	맹지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1타경 73509	1	곡성군 겸면 산정리 338-2 215㎡	대	7,220,000 7,220,000	맹지이고나대지.제시외수목포함
	2	곡성군 겸면 산정리 344-1 218㎡[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지상건물을위해이사건토지대지부분에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7,536,000 7,536,000	지상에매각제외컨테이너1동소재
2021타경 76492	2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577-1 1656㎡[토지일부도로]	전	31,464,000 31,46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
	3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576 942㎡	전	15,072,000 15,072,000	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
	4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578 218㎡[토지일부도로]	전	4,142,000 4,14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
	5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580 248㎡	전	4,960,000 4,9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
2021타경 78382	1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809-17 3002㎡[시설작물[딸기]재배용비닐하우스3동,창고등으로이용중인비닐하우스1동매각제외.관정매각포함]	답	230,750,000 230,750,000	2022타경508[중복].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상소재제시외건물[관리사]매각제외
2021타경 78559	1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333-22 1728㎡	답	57,888,000 57,88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2. 5. 18.[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5. 25.[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향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공정배